

민주 당대표 · 최고위원 후보들 '지방분권 실현' 약속

전국시도의회회장협의회, 지방분권형 헌법개정
자치법 개정 등 지방의회 위상 확립 위한 서면 질의

전국시도의회회장협의회는 19일 더불어민주당 대표 및 최고위원 후보 모두 '지방분권 실현'을 약속했다고 밝혔다. 협의회에 따르면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14일까지 민주당 대표 후보자 3명, 최고위원 후보자 8명에게 ▲지방분권형 헌법개정 ▲지방자치법 개정 ▲중앙당의 광역의회 지원 등 지방분권 실현 및 지방의회 위상 확립에 대해 서면 질의했다. 먼저 지방정부의 자치 입법·조직·재정권 등을 보장하는 지방분권형 헌

법개정에 대해 이낙연, 김부겸, 박주민 대표 후보와 최고위원 후보자 전원이 찬성했고 개헌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는 것이다. 이어 지방자치법과 정치자금법 등의 개정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회신했으며 김종민 최고위원 후보는 국회 논의 필요성을 피력했다. 또한 ▲조례제정 권한 범위 ▲정책 지원 전문인력 도입 ▲의회 인사권 독립 범위 ▲인사청문 제도 도입 ▲지방의회의원 후원회 설치 등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답했다. 의회 인사권 독립 범위는 모든 후보가 광역의회뿐만 아니라 기초의회까지 포함하는 방안이 적절하다고 답했으며 인사청문 제도 도입 및 지방의회 의원 후원회 설치에 김종민 최고위원 후보자를 제외한 당 대표 및 최고위원 후보자 10명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송지용 전북도의회 의장은 "국가 전체 발전의 역동성과 다양성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지방이 주도하고 중앙이 지원하는 진정한 지방분권이 실현돼야 한다"면서 "아울러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은 32년 된 낡은 법을 대대적으로 개선하고 중앙에서 지방으로 대폭적인 권한 이양과 실질적인 지방정부, 주민 중심 자치제를 시행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유호상 기자

민주 한병도 의원 "문 대통령-김종인 비대위장靑 회동 추진 가능성 커졌다"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경선에 출마한 한병도(익산) 의원이 "문재인 대통령과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대위원장의 청와대 회동이 추진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밝혔다. 한 의원은 19일 "호우 피해와 코로나 19의 확산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과 걱



정을 덜어 줄 수 있는 정치권의 협력을 기대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한 "여야정의 정치지도자들이 국가적 현안을 놓고 대화하는 모습만으로 국민들에게 위안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 의원은 "내용과 형식에 너무 구애받지 말아야 한다"면서 "제1야당의 대표가 참석하는 회동인 만큼 위기극복을 위한 새로운 동력이 마련될 수 있다면 정치권은 무엇이든 해야 할 것이다"라고 거듭 강조했다. 특히 "최재성 신임 정무수석이 회동

성사를 위해 때로는 공개적으로 때로는 물밑에서 손이 발이 되도록 움직일 것이다"며 "그 심정을 잘 알고 있고 정무수석시절 2018년 4월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 회동과 같은해 11월의 여야정국정상회담의체 등 여러 번의 여야 대표, 원내대표의 청와대 회동을 성사시키기 위해 노력했던 기억이 뚜렷하다"고 말했다. 한 의원은 "국정 현안에 대한 야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유호상 기자





전주천을 살리시다

자연과 인간이 어우러진 생태하천 - 전주천

전주의 남동쪽에서 북서쪽으로 흐르는 전주천은 유역면적 31.53km², 길이 30km의 지방 1급 하천이다. 전주에서 남동쪽으로 26km 정도 떨어진 임실군 관촌면 슬치에서 발원하여 시의 중심지를 관통하여 흐르는 전주천은 서신동 추천에서 삼천(三川)과 합류하는 만경강 제1지류이다.

전주천 환경개선 자원봉사자 모집
문의전화 063-288-9700



주먹인사하는 통일부 장관과 주한 중국대사
이인영 통일부 장관(오른쪽)이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통일부 장관실에서 싱하이밍 주한 중국대사를 만나 주먹인사를 하고 있다.

J-디지털 교육밸리 구축 본격화

전주시, 과기부 공모사업 '지역 ICT 이노베이션 스퀘어 사업' 선정
국비 51억 등 투입 전주역 앞 VR·AR제작거점센터에 교육공간 조성

전주시가 문재인 정부의 핵심과제이자 민선7기 후반기 시정운영방향의 핵심정책인 디지털뉴딜을 이끌 어갈 인재 양성을 본격화하는 첫 발을 뗐다. 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이 주관한 '2020년 지역ICT 이노베이션 스퀘어 조성사업' (이하 이노베이션 스퀘어 사업)에 최종 선정돼 민선7기 후반기 시정운영 핵심사업인 'J-디지털 교육 밸리 구축'을 위한 첫 발을 뗐다. J-디지털 교육 밸리 구축은 시와 스마트 혁신기업이 한걸음씩 점진적 보편화산업진흥원, 지역대학,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이 함께 디지털 뉴딜 시대에 부응하는 글로벌 핵심

인재를 양성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에 따라 코로나19 이후 국가적 위기를 돌파하고 지속적인 미래 먹거리 창출을 위해 ICT(정보통신기술) 인재를 양성하고 비대면 중심의 디지털 경제로 전환하는 디지털 뉴딜을 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전주 이노베이션 스퀘어사업은 국비 51억 등 총 66억원이 투입돼 전주역 앞 VR·AR제작거점센터에 교육장과 공동작업실(co-work공간), 회의실 등을 갖춘 디지털 뉴딜 인재 양성을 위한 복합교육공간을 조성하는 것이다. 이후 조성된 복합교육공간에서는 전문 교육기관인 한컴아카데미와 함께 기초부터 고급까지 수준별 인공지능(AI)·블록체인 등 신기술 교

육, 지역의 전략산업인 농생명과학 융합분야와 연계된 프로젝트형 교육 과정 등을 개발·운영할 예정이다. 이를 토대로 오는 2023년까지 실무형 인공지능 소프트웨어 융합 인재 1000명, 즉 전주형 디지털뉴딜을 이끌어갈 핵심인력을 양성하는 것이 목표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코로나19 이후 경제와 산업, 시민들의 일상 등 모든 분야가 디지털 빅데이터에 기반 하는 시대로 변화하고 있다"면서 "대한민국 디지털 혁신인재 양성의 산실이 될 J-디지털 교육 밸리를 중심으로 ICT기반 산업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 경제의 혁신 성장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윤상 기자



전북도의회-전주교육지원청 간담회 현장.

지역교육 발전·협력 기반 강화

도의회-전주교육지원청 간담회

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하영민)은 지난 18일 전주교육 발전과 교육 협력 기반 강화를 위해 관내 도의원 15명과 교육청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20년 도의회 - 전주교육지원청 간담회'를 열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제11대 전북도의회 후반기 상임위 구성이 완료됨에 따라 지난 3월 1일자로 부임한 하영민 교육장이 그간 강조해 온 도의회와의 적극적인 소통과 협력 강화 일환으로 추진됐다. 김희수 교육위원장은 소통, 협치, 화합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참석한 다른 의원들도 전주 교육 발전과 교육 구성원 행복 가치 실현을 위해 도의회와 전주교육지원청이 함께 노력해 나가자고 말했다. 하영민 교육장은 "앞으로도 도의회와의 협력 강화를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다"며 대동, 풍류, 율곡을 창신 등 꽃심 전주정신이 교육 정책 전반에 지속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교육재정 확보 등 도의회의 다각적 지원을 당부했다. /장은성 기자

최영일 도의원, '수해 참사 진상조사·보상책 마련'

전북도의회 최영일 의원(순창)은 도내 수해 대참사와 관련해 정부가 아무런 대책도 마련하지 않는다는 맹비난하고 나섰다. 특히 특별재난지역 지정 선포에서 제외된 순창뿐만 아니라 무주, 임실 등 도내 6곳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라며 36도가 넘는 폭염에도 불구하고 세종시 행정안전부 정문 앞에서 무기한 천막농성에 돌입했다. 최영일 의원은 지난 18일부터 "정부는 이번 수해 참사에 대해 조속한 진상조사와 함께 실질적인 보상책을 마련하라"고 정부에 강력한 목소리를 냈다. 그는 "댐 방류량 조절 실패로 인한 인재"라며 "정부는 수해 대참사에 대해 공식사과하고 재발방지를 제시하라"고 주장했다. 최영일 의원은 "이번 수해피해조사는 감사원에서 실시해 투명성을 확보해야 제대로 된 피해가 보상된다"고 강조하며 "60년 된 댐 운영규정을 정부가 전면수정하라"고 덧붙였다. /유호상 기자



호남지방통계청, 2020년 국가인권실태조사 실시

호남지방통계청(청장 이호석)에서는 국내거주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20일부터 9월 3일까지 2020년 국가인권실태조사를 실시한다. 2020년 국가인권실태조사는 전국 8,300 표본가구(호남청 관내 1,550가

구)를 대상으로 실시하며, 조사방법은 조사원이 직접 방문하는 면접조사 또는 필요시 인터넷조사와 자기기입식 조사도 병행·실시한다. /김윤상 기자

김영명의 의심되면 '1339'로